

公的資金白書관련 질의응답자료

2000. 9

金 融 政 策 課

주요 예상질의 내용

1. 공적자금 백서의 작성원칙
2. 공적자금 백서의 주요내용
3. 공적자금 백서의 이용방법
4. 공적자금 지원원칙
5. 공적자금의 회수방법
6.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기로 입장을 선회하게 된 이유
7. 5월말 수급전망의 부실화 배경
8. 공적자금 부실관리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추궁
9. 백서에 기술된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정여부
10. 공적자금 투입성과에 대한 정부의 견해
11.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최종적인 비용
12. 제일은행 처리관련 해외매각대신 정리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었을 것이라는 데 대한 견해
13. 대한생명은행 제3자 매각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14. 영업정지 종금사의 영업 재개후 폐쇄된 사례는 주먹구구식 구조조정 추진의 반증
15.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16. 은행의 낮은 주가는 금융구조조정의 실패와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

1. 공적자금백서는 어떤 원칙하에 작성되었는가?

- ☐ 정부가 이번에 발간하는 공적자금 백서는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세하게 작성됨

○ 성실한 백서의 작성

- 공적자금의 조성에서 운용, 회수전망까지 연대기(chronicle) 형식으로 작성
- 각종 통계 및 금융감독위원회·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의 일지·의결사항을 첨부하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 친절한 백서의 작성

- 시기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외에도 금융권별, 재원주체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내역을 설명
- 제목을 가급적 상세하게 표현하고, 색인란을 작성하여 특정한 단어검색만으로도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함

○ 객관적인 백서의 작성

- 연구기관의 자료, 외국의 사례 등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언론사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 ☐ 정부는 공적자금 백서 발간을 계기로 향후의 공적자금 운용이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년 단위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임

2. 공적자금 백서의 주요내용은?

□ 백서는 “공적자금의 조성, 지원 및 회수, 성과와 평가” 등 3개의 장으로 구성

○ 제1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조성배경과 조성내역을 설명

- 97년말 우리 경제의 모습과 위기발생의 원인을 서술한 후 금융구조개혁의 원칙, 체계 등을 설명하고 공적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
- 부실채권정리, 중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목적별로 공적자금 조성내역을 설명

○ 제2장에서는 공적자금의 지원 및 회수현황·전망을 설명

- 공적자금의 개념을 정의한 후 공적자금의 지원원칙과 의사결정체계를 서술하고, 시기별·금융권별·자금지원주체별 공적자금 지원내역을 상세히 설명
- 공적자금 회수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회수전망을 언급

○ 제3장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와 과제를 설명

-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인하여 우리 금융부문과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중간단계에서의 평가를 기술
-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내용을 제시

○ 부록에서는 세부적인 공적자금 지원내역, 외국의 사례, 관련기관의 주요 의결사항, 공적자금 관련 통계를 수록

3. 공적자금 백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 백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사건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연대기 방식으로 서술한 “제2장 I-4. 시기별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찾아보면 되고,
- ☐ 금융권별로 종합된 내용을 보고 싶거나, 자금지원주체별로 지원된 내용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제2장 I-5. 금융권별 구조조정 추진과 공적자금 지원내역” 또는 “제2장 I-6. 자금지원주체별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찾아보면 됨
- ☐ 또한, 주요 단어와 관련된 사항을 알고 싶을 경우 “색인”을 찾아볼 경우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 특히,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세부 의결내용이 요약되어 첨부되어 있고, 상세한 통계자료가 다양한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지원내역까지 파악이 가능

4. 공적자금의 지원원칙은 무엇인가?

☐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데 중점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엄격한 원칙을 정립하여 적용

○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지원

- 회생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
- 공적자금의 투입규모를 결정할 때는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부실규모를 실사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부담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엄밀하게 산정
-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 거래관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회수가능성이 높고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안 모색

○ 자기책임(손실분담)의 원칙 확립

- 주주(감자), 경영진(교체), 종업원(인원감축, 임금삭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지원
-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검사를 통해 부실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추궁

○ 국제적 기준에 따른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

- 각국의 예를 감안하여 구조조정전문기구(예보,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효율적 업무집행 도모 등
- IMF, IBRD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제적 기준의 자금지원 준거 정립 등

5. 공적자금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 ☐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75조원의 부실채권을 시가로 매입하여 이중 매입가격기준 15.9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17.9조원에 매각하여 이미 1.9조원 규모의 매각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는 예금대지급, 출연자금은 파산금융기관의 잔여재산등을 정리하여 지급된 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게 되고
 - 정부가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금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출자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액면가이상으로 매각함으로써 출자지원금액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 만약 출자금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유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매각하게 되면 주식매각차익으로 예금대지급, 출연에 의한 손실을 상당부분 메울 수 있게 될 것임
- ☐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이 수익성을 갖춘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주식매각이익이 극대화되도록
 -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약정서(MOU)에 따라 금감위와 예보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공적자금의 회수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6. 공적자금 추가조성이 없다고 했다가 추가조정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99년 하반기이후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라 발생한 추가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 회수자금 활용(recycling)방법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 공적자금의 소요를 제때에 맞출 수 없어 자금투입의 시기를 놓쳐 부실을 키울 수 있고
- 재활용 재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보유재산의 매각을 서두르다 보면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낮은 주가수준이 지속되는 등 재산의 효율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해 나갈 수 있으며,
- 추후 시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유재산을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착되는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임

☐ 이와 함께 충분한 공적자금의 조성이 시장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금융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시장친화적 정책선택을 택함으로써

- 구조개혁 마무리와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임

7. 지난 5월에 발표한 수급전망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이 되는 데 그런 부실한 전망을 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 지난 5월 수급전망당시에는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한다고 발표할 경우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보았고,
 - 그동안의 공적자금 지원과 자체 구조조정노력 등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우그룹문제 등에 따른 추가 부실 부담을 자체 흡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이에 따라 시간을 두고 공적자금을 회수한 후 재사용해 나가면서 남은 지원소요를 충당해 나가고자 했던 것임
- ☐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어 예보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재활용하려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추가조성을 검토하게 된 것임
 - * IMF에서도 최종협의과정에서 우리측에 보유주식의 매각을 늦출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 공적자금 추가조성 사유를 살펴보면
 - 당초 발표한 30조원의 소요규모에서 일부 소요액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고,
 - 추가로 발표된 은행클린화 및 중금사 정리과정에서 지원소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 IMF와의 합의에 따라 보유주식매각을 연기함에 따라 조달계획상의 차질이 커져서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게 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 한편, 금융구조개혁의 완결과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였음

8. 정부는 부실책임이 있는 기업·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공적자금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그간의 부실관리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추궁은 없는가?

☐ 공적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실문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강도높은 책임추궁을 전개중에 있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과 기업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책임추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을 통해 워크아웃기업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간 협조를 통한 부실기업주 책임추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하는 방안과 정리 금융기관과 거래한 채무기업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내부자거래, 부실회계 등으로 인한 기업부실화 및 주주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조사권을 강화해 나갈 것임

☐ 한편, 공적자금의 조성·집행과 회수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가 각각 법령이 부여한 권한범위내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업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절한 통제를 받고 있음

9. 백서 마지막에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가?

- ☐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상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이에 따라 중간점검의 결과로서 보완해야 할 문제점과 남아있는 과제를 인식하게 된 것임
- ☐ 남아있는 과제는 그동안 정부가 공적자금의 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 다소 추진에 미흡한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계속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임

10. 10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을 사용하고도 여전히 큰 규모의 부실채권이 남아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와 금융기관의 채무자인 기업 실정을 반영하게 됨

○ 따라서, 기업의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임

○ 현재 상당수의 기업이 워크아웃과정에 있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실채권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기관의 영업이익 등으로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0.3말 현재 91.4조원의 FLC 기준 고정이하여신의 45.5%인 41.6조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음

□ 한편,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의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지원결과 위기극복 및 국가신인도 개선, 금융중개기능 회복 등 유·무형의 성과가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앞으로 은행의 클린화와 부실종금, 금고, 신탁 등의 정리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적정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여 뒷받침해 나갈 경우

○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11.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게 될 최종적인 비용은 얼마인가?

<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

- ☐ 공적자금 지원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부분은
 - 이미 조성되어 사용된 64조원의 공적자금과 앞으로 추가로 조성될 공적자금 중 회수되지 못하여 재정의 부담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한정될 것임
- ☐ 예금대지급·출연에 따른 손실에서 파산재단의 정리과정에서 일부 회수되는 부분과 예보보유 금융기관 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이익을 차감하고 남는 부분이 최종비용이 되며
 - 금융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후 공적자금의 회수규모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한 최종비용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 정부는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와 주가회복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보유주식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를 극대화하여 국민의 최종비용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예금보험공사 자금회수에 따른 비용

예금대지급 및 출연	파산재단 회수분	⇒ 최종손실
	예보보유 금융기관 주식매각이익	

< 자산관리공사 >

- ☐ 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당초 시가에 부실채권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손실없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 특히, ABS(자산유동화증권),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근거법률 제정추진중) 등 부실채권 매각관련 각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경우 부실채권의 순조로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2000.8월말 현재 자산관리공사는 매입부실채권 75.7조원(장부가)중 34.1조원(전체의 34.5%, 매입가격은 15.9조원)를 정리하여 17.9조원을 회수함으로써 1.9조원의 매각이익을 실현

< 채권이자 문제 >

- ☐ 공적자금의 조성을 위한 정부보증채권의 발행에 따른 이자 융자금액의 경우에도 양 공사가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 최종적인 회수 및 상환결과를 보아야 미상환규모가 결정되고 비용으로 간주해야 될 것이지만,
- 공적자금 회수규모가 원금외에 이자분까지 충당할 정도로 회수되지 않음으로써 일부 이자지원금액이 제정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임

12. 제일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제일은행에 대하여 전체 공적자금의 10%가 넘는 총 12.5조원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약 3조원정도 추가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매각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지 않았겠는가?

□ 제일은행문제가 표면화된 97말~98년초의 한국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해외매각은 최선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 본격적인 금융·기업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던 만큼 제일은행의 조기정상화가 시급했음

- 제일은행을 청산정리했을 경우 Bank Run의 확산과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일대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임

- 선진국에서도 대형부실은행은 금융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퇴출보다는 합병, M&A 등으로 정리

○ 당면과제인 대외신인도 개선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매각이 최선의 선택

□ 제일은행을 해외매각하지 않고 P&A, 폐쇄 등을 통해 정리했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임

○ 누적된 부실의 정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해외매각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 제일은행을 청산시켰을 경우 예금대지금을 위해 29.6조원(97말 기준 예수금 규모)의 공적자금 부담이 발생했을 것임

○ 이 경우 향후 경영정상화에 따른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대외신뢰도 훼손과 대형은행 폐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 등 무형의 비용을 추가로 감수했어야 할 것임

13. 대한생명은 조기에 제3자 매각을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 ☐ 당초 정부는 자산부족규모가 2.9조원에 달한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개매각을 추진(99.3)
 - 99.5~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투자자선정에 실패
 - 매각입찰에는 LG그룹, 한화그룹, AIG(미국) 등이 참여하였으나, 자본투자예정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훨씬 미달하거나 자금조달가능성 및 투명성이 미흡
- ☐ 이에 따라, 회사가치의 보전과 보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99.11월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先경영정상화를 추진했던 것임
- ☐ 당시 입찰자에게 대한생명이 매각된 경우와 공적자금투입에의한 先경영정상화 방안을 비교해 보면
 - 매각된 경우에도 상당규모의 손실보전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약 2조원수준)할 뿐만 아니라 회수가능한 공적자금은 없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음
- ☐ 따라서 당시 입찰자측에서 제시한 조건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후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 향후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 및 매각과정에서 정부선택의 정당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4. 대한종금, 나라종금, 중앙종금 등은 98년 영업정지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결국 문을 닫았음. 이는 그동안의 공적자금 투입 및 금융구조조정이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 정부는 97말~98초 30개 전 종금사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음

○ 경영평가위원회는 98.3월말 BIS비율 4%, 6월말 6% 충족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경영평가위원회는 나라·대한종금의 경우 획기적인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없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였음

□ 그러나, 98.3월중 나라·대한종금은 각각 자체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평가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 4%를 충족하게 되었음

○ 이에 금감위는 동 유상증자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98.5월부터 영업재개를 허용하였던 것임

□ 이후 양 종금사는 추가증자 등 경영정상화를 착실히 추진하였으나, 기아·대우 등 부실기업정리의 영향으로 인한 추가 손실로 결국 퇴출된 것임

○ 대한종금은 98.11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에 따른 대규모 부채탕감으로 기아여신이 추가부실화(99.6월 인가취소)

○ 나라종금은 99.8월 대우위크아웃이 추진되면서 대우계열사 지원자금이 부실화(2000년 4월 인가취소)

15.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가 합병지원을 위해 중자지원한 한빛,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 예보, 금감위와 해당은행간에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여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집중된 관치체제를 구축하여 강도높은 정상화 추진중
- 한빛은행의 경우에는 99.1.22일 금감위원장, 예보사장, 한빛은행장간에 “수익성 강화, 자본확충, 부실채권 정리, 리스크관리 등” 11개 부문 필수이행사항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세부이행계획 등을 담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하고
 - 금감위에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중
 - 99.5, 99.8, 99.11, 2000.3월 이행실적 점검(99.11월에는 예보와 금감위 공동으로 임점확인)
- 조흥은행의 경우에는 99.11.12 금감위원장, 예보사장, 조흥은행장간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체결하고
 - 금감위에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중(2000.3월 이행실적 점검)

☐ 앞으로 정부는 정부출자은행에 대해 자산건전성지표와 함께 수익성지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 정기적인 점검에 따른 평가결과가 은행의 경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으로써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추가회복을 도모해 나갈 것임

16. 은행의 주가가 액면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것은 금융 구조조정이 실패했고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은행의 주가는 해당 은행의 경영정상화 정도와 부실보유 규모 및 향후 재발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그동안 부실은행의 과감한 퇴출과 합병은행등에 대한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1인당 생산성은 크게 제고되었음

○ 은행의 건전성제고 효과만 감안한다면 은행의 주가가 현재 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나,

○ 현재까지 정부출자은행의 주가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 아직 해당은행의 수익성 개선 등 경영정상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감자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따라서, 9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는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은행의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되고 그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한 클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 은행 주가의 가치도 높아짐으로써 구조조정의 성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